

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

2018. 11. 26

금융위원회
금융감독원
여신금융협회

I. 국내 카드산업 현황 및 평가	1
II. 카드수수료 개편 경과 및 금번 개편의 과제	2
1.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산정 경과	2
2. 금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과제	3
III.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방향	5
1. 적격비용 재산정	6
2. 카드수수료 개편방안	8
IV.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	3
1.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	13
2.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	14
V.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과제 처리방향	5
1.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·완화 관련	15
2. 저율의 단일수수료율	16
3. 가맹점 단체협상권	16
VI. 필요조치 및 추진일정	17

I. 국내 카드산업 현황 및 평가

□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신용·체크카드의 거래편의성,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한 제도구축에 힘입어 총 민간 지급결제의 70% 이상을 점유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

- 의무수납제('87년) 도입 이후 대다수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는 등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카드결제 인프라가 구축

* 신용카드 가맹점수 : ('02년)148만개 → ('10년)208만개 → ('16년)250만개 → ('18.下)269만개

- 카드사용액 소득공제('99년),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('00년) 등을 통해 카드시장이 급성장*하고,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

* 신용카드 결제규모(조원) : ('08년)356.3 ('11년)451.6 ('14년)500.5 ('17년)627.3

* 지급결제수단별 이용비중('16년 금액기준) : 신용 54.8% 체크·직불 16.2% 현금 13.6% 등

□ 카드사용 확대는 거래편의성 제고, 세원 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, 결제 특성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부작용도 노정

- 외상거래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조달·대손비용과 거래승인·매입정산 등 신용카드 네트워크 유지·관리 비용 불가피
- 카드이용자, 카드사, 가맹점 등 3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한 사회적 논란 지속

-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마케팅비용이 지속 증가*하고 대다수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, 카드산업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

* 마케팅비용 추이 ('14년) 4.1조원, ('15년) 4.8조원, ('16년) 5.3조원, ('17년) 6.1조원

- 지급결제시장에서 카드의 지배력 고착화로 핀테크 성장에 따른 지급결제 혁신수단의 시장정착·확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

⇒ 신용카드 결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

II. 카드수수료 개편 경과 및 금번 개편의 과제

1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산정 경과

◆ 카드수수료율은 '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(적격비용)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 채택

◆ 올해는 '15년에 이어 3년 주기의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시기

□ '78년부터 35년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* 하에서 가맹점간 수수료 양극화**에 따른 사회적 논란 집중

* 서민업종 3%, 일반업종 4%, 유흥·사치업종 5% ** 대형 1.5% vs 일반 4.5%

□ '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*(적격비용)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

- 다만, 정책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영세·중소가맹점에 대하여는 적격비용 미만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를 시행

□ '12년부터 금융당국은 3년주기로 공익적 관점에서 적격비용을 기초로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우대구간과 우대수수료율 조정

- (2012)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
- (2015)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및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

□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우대구간 확대(2·3억원→3·5억원, '17.7월), 상한 인하(2.5%→2.3%, '18.7월) 등 부분적인 수수료율 개편 시행

		적격비용 도입 전 ('07~'12년중 6차례)	적격비용 도입 후 (괄호는 체크카드)			
			'12년 개편 후	'15.1월 말	'15년 개편 후	현행
우대구간 및 우대수수료율	영세	0.48억원 미만 2.3% → 2억원 미만 1.8%	2억원 이하 1.5% (1.0%)	2억원 이하 0.8% (0.5%)	2억원 이하 0.8% (0.5%)	3억원 이하 0.8% (0.5%)
	중소	-	-	2~3억원 2.0% (1.5%)	2~3억원 1.3% (1.0%)	3~5억원 1.3% (1.0%)
상한		4.5%~3.6%	2.7%	2.5%	2.3%	
평균 (우대, 특수가맹점 제외)		-	2.14%→2.12% (12→13년)	2.10%→2.09% (15→16년)	2.08%	2.08% (17년)

* 법령상 우대구간 및 우대수수료율이 정해지지 않고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

◆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가맹점, 카드이용자, 카드사 및 전문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 및 제기 과제를 수렴

□ (카드수수료 경감)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용 카드 이용액 증가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호소가 지속

*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(조원) : ('12년)478 ('14년)500 ('16년)596 ('17년)627

□ (수수료를 역진성) 일반 가맹점(500억원 이하, 평균 2% 초과)은 상대적으로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에 따른 혜택을 적게 누림에도,

○ 대형 가맹점(500억원 초과, 평균수수료 약 1.94%)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*하는 등 수수료 수준의 불공정 문제 제기

* 원가 차이뿐 아니라, 매출액 규모에 따른 협상력 우위 차이에도 일부 기인

□ (의무수납제)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의 협상력을 저하* 시키고 신용카드를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고착화시켜 저비용 결제수단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

*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, 신용카드 수납 여부 등의 선택권이 없어 수수료를 책정시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

□ (가맹점 단체협상권) 일반-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차이가 가맹점간 협상력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단체협상권 필요성 제기

○ 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사와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 변경 요구

□ (저율의 단일수수료)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부과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

○ 모든 가맹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수수료율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관점

① 카드사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정

○ 실무 TF를 구성*하여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원가분석 작업 진행(5~8월)

* 금융위, 금감원, 여신금융협회, 컨설팅 기관

○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실무 TF 논의(8~10월)

* 비용 항목별 세부 반영기준 확인 및 비용 부담주체 논의, 現 적격비용 항목별 개선 필요사항 발굴·검토,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

② 관계기관 TF 운영

○ 관계기관 TF 구성* 및 1차회의 ('18.5.31)

* 기재부, 중기부, 금융위, 금융연, 금감원, 여전협회, 공인회계사회,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연대 대표, 변호사 및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

○ 관계기관 TF 2차회의 ('18.10.22)

* ①적격비용 재산정 작업결과, ②의무수납제 완화 방안 ③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, ④해외 카드수수료 현황 등 논의

○ 관계기관 TF 3차회의 ('18.11.23)

* ①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, ②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마케팅 관행제도개선 방안 ③의무수납제, 저율의 단일수수료율, 가맹점 단체협상권 등 최종 검토

③ 업계 간담회 ('18.10.25, 10.31)

○ 카드사 임원 및 실무진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적격비용 산정 방식 개선 방향, 카드사 마케팅 관련 개선방향 등 논의

④ 카드사 CEO 간담회 ('18.11.23)

○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설명 및 업계의견 청취

⑤ 의무수납제 관련 공청회('18.7.27) 및 설문조사('18.10월중)

○ 금융연구원이 주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수행

Ⅲ. 카드수수료 개편 기본방향

低비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카드수수료를 체계로 전환

가맹점	카드사	소비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 격차 해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가산출체계 개선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 이용수준 적정화

<p>◆ 적격비용 재산정</p> <p>✓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</p> <p>✓ 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를 격차 해소</p>	<p>①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적격비용에 반영</p> <p>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쏠가맹점 공통비용 개별화 - 매출액 구간별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 설정
<p>◆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</p> <p>✓ 수수료 인하여력을 차상위 일반가맹점에 집중 배분</p>	<p>① 우대구간 확대(5억원 이하→30억원 이하)</p> <p>② 연매출 500억원이하 평균 수수료율 인하</p>
<p>◆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</p>	<p>① 부가서비스 감축 및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개선</p> <p>② 법인회원·대형가맹점에 과도한 이익제공 제한</p> <p>③ 카드회원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합리화</p>
<p>◆ 가맹점 단체협상권</p>	<p>① 현행 적격비용 체계 하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협상력 부족을 공적 중재를 통해 보강</p> <p>② '19년중 현행 체계 하에서 가맹점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</p>

1 적격비용 재산정

① 적격비용 항목별 개선

1. 적격비용 개요

□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전법에 따라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적격비용(원가)에 기반하여 산정

*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함(법§18의3)
→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(적격비용)만을 수수료를 산정에 반영(감독규정§25의4)

* 카드수수료율 = 적격비용 + 카드사별 마진

○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, 위험관리비용, 일반관리비용, 뱅수수료 비용, 마케팅비용, 조정비용으로 구성(여전법 감독규정 [별표4])

2. 비용항목별 개선사항

항목	현행	개선
자금조달비용	· 유동성확보기간(거래승인일~거래대금 지급일)을 신용공여기간으로 인정	· 유동성확보기간을 신용공여기간에서 제외
위험관리비용	· 대손준비금 연도별 차등 인정 · 1~10등급 및 무등급까지 대손비용 인정 · 연체채권 관리·회수비용 포함	· 감독목적상 추가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전부 제외 · 1~6등급까지만 대손비용 인정 · 연체채권 관리·회수비용 전부 제외
마케팅비용	· 1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동일한 상한 적용 · 부가서비스 항목의 상당부분을 공통비용으로 인정	· 매출액 구간별 상한 세분화 · 부가서비스 항목을 가맹점별 개별 비용으로 반영하고 공통비용 대폭 축소
일반관리비용	· 카드사 일반관리비용에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 포함	· 카드사 일반비용 중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 제외
조정비용	· 야간거래 또는 비대면 거래가 많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가산	· 야간거래 또는 비대면 거래가 많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가산폭 제한

3.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

- (현황) 카드회원에 대한 포인트,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상당부분(평균 80% 추정)을 **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에 공통** 배분
 - 가맹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2개 구간(10억원 이하 및 초과)으로 구분하여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등 적용
- (문제점) 부가서비스 이용이 대부분 대형가맹점에서 이루어지나, 공통비용 적용비중이 높아 중소가맹점에 역진적 부담 발생
 - 또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동일한 마케팅비용 상한이 적용되어 초대형/일반가맹점간 마케팅혜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
- (개선) ①부가서비스 적립·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, ②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구간을 세분화
 - * 차등화 구간 : 30~100억원, 100~500억원, 500억원 초과
 -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, 일반/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

② '18년 적격비용 산정결과

- '17년 이후 既 발표한 정책(약 0.6조원)*에 따른 카드사 수익감소분 고려시 **純인하여력은 0.8조원** 수준
 - * 우대구간 확대('17.7월), PG하위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를 적용('19.1월 예정), 신규사업자 우대수수료를 적용(한금)('19.1월 예정) 등

<카드수수료 주요 인하요인>

- ① 직전 3개년(15~17년)간 금리하락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등 감소
- ② 기존 비용산정 방식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인하여력 추가 확보 ※ **비용항목별 개선사항** 참고

2 카드수수료 개편방안

① 인하여력 배분원칙

◆ **차상위 자영업·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집중배분하고,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**

-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*되고,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영세·중소가맹점은 **현행 수수료율 수준 유지**

* (참고) '15년 인하여력 6,700억원 대부분이 영세·중소에 배분(영세 1.5%→0.8%, 중소 2.0%→1.3%)

** 문재인 정부 출범 후 '17~'18년에도 총 6천억원 규모의 영세·중소가맹점 중심의 지원대책 既 발표·시행(우대구간 확대,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등)

【참고 :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】

- ◎ 개인사업자 등이 **신용카드 매출전표** 등을 발급한 금액의 1.3%**를 납부세액에서 공제(부가가치세법 §46)

* 신용카드매출전표, 직불카드영수증, 선불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

** 음식점/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의 2.6%, 그 외 사업자에 대하여는 결제금액의 1.3%를 공제

< 부가세 매출세액 공제를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 >

구분	가맹점수 (천점)	비중 (%)	가맹점 수수료율	년수수료* (만원)	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		가맹점수수료 실질부담 효과	
					1.3% (기타업종)	공제 한도	年부담액 (만원)	실질 수수료율
영세 (3억원이하)	2,049	76.1	0.8%	~240	390	500	0	△0.5%
중소 (3~5억원)	212	7.8	1.3%	390~650	390~650	500	0~150	0~0.3%

*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정

- 내수부진, 비용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인하여력 집중 배분
- 또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 적용을 통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

② 카드수수료를 개편안

- ◆ **우대수수료를 적용구간을 現 5억원 이하 → 30억원까지 확대**
 ⇒ 영세·중소·일반가맹점간 단계적 차등 수수료를 체계 마련
- ◆ **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를 1%대로 인하 유도**
 ⇒ 대형/일반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를 격차 개선

< 신용카드 >

- ① (우대가맹점) 우대수수료를 적용구간을 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
 - 연매출 5~10억원 및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.65%p(약 2.05%→1.4%) 및 약 0.61%p(약 2.21%→1.6%) 인하
- ② (일반가맹점)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를 약 0.3%p 인하(평균 2.2%→ 평균 1.9%) 유도
 - 연매출 100~500억원 가맹점도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통해 약 0.22%p 인하(평균 2.17%→ 평균 1.95%) 유도
 - ※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, 각 사별 비용을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음

< 체크카드 >

- ① (우대가맹점)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를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
 - 연매출 5~10억원 및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.46%p(약 1.56%→1.1%) 및 약 0.28%p(약 1.58%→1.3%) 인하
- ② (일반가맹점) 적격비용 인하효과를 반영하여 단일 수수료율을 '1.35%+계좌이체 수수료율(0~0.2%)'로 조정하여 평균 0.15%p 인하

참고2

카드수수료 개편안(종합)

< 신용카드 >

	구분 (연간 매출액)	카드수수료율	
		현행	변경
우대 가맹점	3억원 이하	0.8%	0.8%
	3~5억원	1.3%	1.3%
	5~10억원(신설)	약 2.05%	1.4%
	10~30억원(신설)	약 2.21%	1.6%

* 연매출 30~100억원 가맹점의 現 평균 수수료율 2.20% → 평균 1.90%로 인하 유도
 연매출 100~500억원 가맹점의 現 평균 수수료율 2.17% → 평균 1.95%로 인하 유도

< 체크카드 >

	구분 (연간 매출액)	카드수수료율	
		현행	변경
우대 가맹점	3억원 이하	0.5%	0.5%
	3~5억원	1.0%	1.0%
	5~10억원(신설)	약 1.56%	1.1%
	10~30억원(신설)	약 1.58%	1.3%

*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現 평균 수수료율 1.6% → 평균 1.45%로 인하

③ 기대효과(추정)

※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

① 우대가맹점(30억원 이하)이 **전체 가맹점(269만개 기준)의 93%**로 확대

* '12년 개편 後 (12.1월)68% → (13.7월)73% → (15.1월)75% → (16.1월)78% → (18.7월)84% → (19.1월)93% 예상
'12년 개편 後 '15년 개편 後 '18년 개편 後

②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**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**

○ (5~10억원) 전체 인하분의 37% 배분 ⇨ **신용 0.65%p, 체크 0.46%p ↓**
19.8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 예상

*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%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,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~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

○ (10~30억원) 전체 인하분의 30% 배분 ⇨ **신용 0.61%p, 체크 0.28%p ↓**
4.6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

③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*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

* 現 30~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.18% vs.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.94%

⇨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<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>

가맹점 구분 (연 매출액 기준)		현행	개선안	인하폭	
신용	우대 가맹점 (우대수수료율)	~3억 원	0.8%	0.8%	-
		3~5억 원	1.3%	1.3%	-
		5~10억 원	약 2.05%	1.4%	약 0.65%p
		10~30억 원	약 2.21%	1.6%	약 0.61%p
	일반 가맹점 (평균수수료율)	30~100억 원	약 2.20%	평균 1.90%	평균 0.3%p
		100~500억 원	약 2.17%	평균 1.95%	평균 0.22%p
체크	우대 가맹점 (우대수수료율)	~3억 원	0.5%	0.5%	-
		3~5억 원	1.0%	1.0%	-
		5~10억 원	약 1.56%	1.1%	약 0.46%p
		10~30억 원	약 1.58%	1.3%	약 0.28%p
	일반 가맹점 (평균수수료율)	30억 원 초과	약 1.60%	평균 1.45%	평균 0.15%p

참고3

주요 업종별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예상(추정)

※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(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%로 가정)

① (편의점)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~10억원의 편의점 1.5만개의 연간 322억원(가맹점당 약 214만원)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
○ 연매출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(가맹점당 약 156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
② (음식점)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~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.7만개의 연간 1,064억원(가맹점당 약 288만원) 경감 기대

○ 연매출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(가맹점당 약 343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
③ (골목상권) 매출액이 5~10억원인 슈퍼마켓,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~129억원(가맹점당 약 279~322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
○ 연매출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~262억원(가맹점당 약 312~410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
IV.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

- ◆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, 카드이용 합리화를 도모하며,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
- ◆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

1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

1.1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

①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

-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단계적 허용방안* 마련(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'19.1월까지 기준 마련)

* (예)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,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②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

-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분석시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만 감안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(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연내 약관심사 세부기준 마련)

* (예) 가맹점수수료 등 수익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 제공

1.2 대형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제한

-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*하는 등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(여전법 §18의3 유권해석)

* (예) 대형가맹점 포인트비용 대납 등

-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 제공을 금지하고 프로모션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* 강화(여전법 시행령 개정)

* (예)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시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등

-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토록 지도(행정지도 및 법인카드 표준약관 제정)

3.3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합리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개선

-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 탑재
- 반면,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 개선(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'19.1월까지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 마련)

2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

-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,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

- 금융당국-업계간 TF를 구성하여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

<카드업계 건의과제 예시>

1.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및 부수업무·겸영업무 활성화 지원

- 카드사 보유 정보 활용을 위해 부수업무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'자문서비스'의 범위에 데이터 활용을 위한 '정보 제공·분석업무'가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시

2. 카드사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

- ① 고객 의사 확인 후 선택적으로 영수증 출력이 가능토록 관계부처 협의 후 제도적 근거 마련
- ② 가맹점 계약 갱신시(1년단위 자동연장) 매년 유사한 시기에 여러 카드사로부터 동일 내용의 계약연장 서면 안내문을 중복 수신하지 않도록 연장 안내 통보방식 효율화
- ③ 카드사가 SMS/LMS로 발송하는 정보성 메시지* 중 민감성 정보를 제외한 안내를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토록 허용

* 카드배송 안내, 카드 재발급 안내 등

V.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과제 처리방향

1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·완화 관련 ⇨ 중장기 검토

1. 논의경과

- ① 공청회('18.7.27) : 의무수납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점진적 완화 의견이 많았고, 저비용 지급결제수단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
 - ② 설문조사('18.10월중) : 일반국민(소비자), 전문가 그룹은 의무수납제 폐지에 부정적(70%내외)인 반면, 가맹점은 폐지 찬성(53%)이 다소 우세
 - 또한,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, 대체결제수단 요구 및 현금 할인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*
- * ①가맹점의 저비용 대체결제수단 요구 허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
②소비자는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반대, 현금결제시 할인은 찬성하나, 가맹점은 대체로 소비자 와 반대
- ③ 관계기관 TF('18.10.22) : 의무수납제 폐지·완화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나 협상력 제고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
 - 다만, 직불형 모바일결제, 체크카드 등 저비용 간편결제 수단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

2. 처리방향

- 신용카드가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·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
 - 가맹점의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및 현금결제 할인 허용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가맹점간 입장이 상이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
 - 다만, 신용카드 편중현상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,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·다변화해 나갈 필요
- ⇒ 현금 외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시 가격할인 허용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

2 저율의 단일수수료를 ⇨ 가맹점간 수수료를 공정성 제고

1. 검토배경

- 모든 가맹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저율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*
- * 일부 대형가맹점에 비해 일반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
- #### 2. 처리방향
- 비용구조가 상이한 가맹점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행 수수료율 산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음
 -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
 -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일반/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

3 가맹점 단체협상권 ⇨ 현행 체계 하에서 취지 달성방안 강구

1. 검토배경

- 일반가맹점(평균 2.1%)과 대형가맹점(약 1.8~2.0% 수준)의 수수료율 차이가 가맹점간 협상력 차이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제기
 - 일반가맹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

2. 처리방향

- 금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층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집중 배분
- ⇒ 일반가맹점의 협상력 부족을 정부가 보완
- '19년중 現적격비용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(연구용역 추진)

V. 필요조치 및 추진 일정

①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('19.1월말)

① 여전법 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추진(우대범위 확대 등, 금융위)

② 여전협회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변경 및 재산정 작업 진행

② 개편 수수료 산정현황 점검('19.1분기, 금감원)

※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

③ 「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」 운영(~'19.상반기, 금융위·금감원·업계)

<세부 과제별 추진일정>

추진 과제	필요조치	일정
1. 카드수수료 개편		
① 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이 되는 매출액 구간 확대	시행령 개정	~'19.1월말
② 우대수수료를 조정	감독규정 개정	
③ 적격/부적격비용 항목 개편내용 반영	감독규정 개정	
2. 마케팅 관행 개선		
④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합리화	세부 적용기준 마련	~'19.1월
	감독규정 개정	~'19.上
⑤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	유권해석	~'19.1월말
⑥ 대형법인회원 등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	시행령 개정	~'19.上
⑦ 카드 수익성 분석기준 개선	약관심사기준 변경	~'18.12월말
⑧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 제한	행정지도	~'18.12월말
	표준약관 제정	~'19.上
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간소화	상품 운영안 마련	~'19.1월
3. 카드사 경쟁력 제고		
⑩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 허용	감독규정 개정	~'19.上